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지역개발

1993년 8월 18일 / 중소기업회관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 原子力事業과 地域發展

이 상 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에너지문제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과 함께 세계인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각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과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즈음의 국제정세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지난 90년에 발발한 걸프전쟁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자력발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자원빈국으로서, 총소비에너지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기소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지구의 환경보전문제로 인하여 주중 에너지원인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전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태양력이나 풍력, 조력 등 자연에너지의 개발은 그 성과가 미미하여 최소한 당분간은 크게 기대를 할만한 형편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에너지사정 속에서 세계 각국은 한 때 안전성 문제로 주춤했던 원자력 발전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될 때까지는 원자력의 선택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 폐기물 관리의 당면과제

지난 1978년 경남 고리에 원자력의 첫 불이 밝혀진 이래 우리나라는 현재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체 전력의 약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문제라는 두 개의 커다란 틈바구니 속에서 원자력은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핵폭탄에 대한 기억과 미국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사고, 그리고 옛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정

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정책도 과거처럼 정부당국과 원자력사업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는 원자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은 너무도 절박하다 하겠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지난 90년도의 안면도사태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사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수십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입증된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그 어떤 시설보다도 기피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주는 혐오의 이미지가 복합된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하여 그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려의 상당부분이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방사

성폐기물관리사업이 당면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일과 함께 원자력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다.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각종 관련연구시설이 건설되고 운영될 경우 그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먼저 다량의 건설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건설현장이 인접한 지역사회에 많은 인력의 고용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도 시설의 성격상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단순노무의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고용증대는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원자력사업자와 지역간의 일체감을 조성해 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인건비와 자재구매비 등을 포함한 각종 지출로 인하여 지역주

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효과와, 사업자가 세금이나 각종 부과금의 납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증대시켜 주는 재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경제 파급효과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로, 교량, 통신망, 전력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들어서는 지역이 대체로 인구밀도가 낮은 오지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효과는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종 파급효과들은 지역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별도의 지역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지역개발지원

원자력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들간의 인식의 차이가 크다. 원자력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신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지역주민들은 만일 자신의 거주지역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건설된다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이 갖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또는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불안감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보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적 집단이기주의 현상도 개인 혹은 부분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의 상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해결책은 이들 상충하는 이익들이 타협을 통해 조화되도록 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지역지원사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비록 정신적인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소수에게 위험부담이 증가된 대신 전체 사회의 이익이 증대된다면 보다 큰 위험부담을 지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여기에 지역지원사업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6월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지원에 대한 정부의 신뢰감을 높이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

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보여진다.

이 법률안은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건설될 주변지역의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 국민적 합의는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 원자력발전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은 안정적인 정책수행의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행은 잘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당국과 일반국민, 특히 지역주민과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관련정책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공개와 신뢰구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식

전환도 문제해결을 위한 또 다른 선행조건이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한 노력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일이며, 주민의 복리와 이익이 되는 조치를 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타협자세가 필요하다. 수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자력시설 건설부지를 확보한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은 방사성폐기물처리분장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처분장이 건설되는 지역의 정신적 피해부담을 인정하고 이러한 피해부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어도 경제적 책임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나누어 맡겠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하나 하나가 모두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를 풀어 나가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보아 최선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차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